

<세션1 - 현 정부의 ESG New 로드맵>

송경진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 메가 위협으로 부상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필수 조건과 대책의 하나가 ESG다. 기후 위기는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경영 등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은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다탄소배출 제조업이 많은 한국경제와 기업은 더욱 그렇다.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후 위기 대응에는 기업의 참여와 기업 내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많은 기업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시 정보 제공, 명확한 공시 기준 마련, 통합 평가 체계 구축,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부문에서 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현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과 ESG 경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ESG 기본법 제정과 ESG 공시 조기 의무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ESG 정보 신뢰도 제고와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자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원칙과 지침)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기업의 법규제 대응 역량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에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불평등 완화, 산업안전 및 보건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 강조된다.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공급망 내 대기업의 맞춤형 지원과 파트너십이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에 필수적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ESG 경영혁신에는 저탄소 전환 신기술 개발도 핵심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리더십의 의지와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치권과 꾸준한 교류, 설득 및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KNN 동남권 ESG포럼은 지역의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 동남권 지역의 ESG 구심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